

조 바이든(Joe Biden)의 정책공약과 지방정부의 합의

○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책

코로나19로 인해 타격받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미국의 2차 경기부양책인 HEROES Act(Health and Economic Recovery Omnibus Emergency Solutions Act) 발효 직전

- 미국은 2020년 3월 1차 경기부양책으로서 「CARES Act(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를 통과시키고, 이 법안을 통해 총 여섯 부분(개인 및 가계, 기업집단, 중소기업, 지방정부, 공중보건, 교육)에 대하여 2조 달러에 해당되는 현금지원을 실시하며 코로나19 사태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개인 및 가계를 우선적 지원
- 2020년 11월 기준 미국의 2차 경기부양책인 「HEROES Act」는 현재 하원의회의까지 통과한 상태이며 상원의회의 통과 대기 중
 - 「HEROES Act」는 개인별 현금직접 지원이나 연방정부 실업급여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직원 급여 무상 지원 프로그램 등과 같이 중산층이 정부지원을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될 예정
 - 「HEROES Act」에서는 「CARES Act」와는 다르게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75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집행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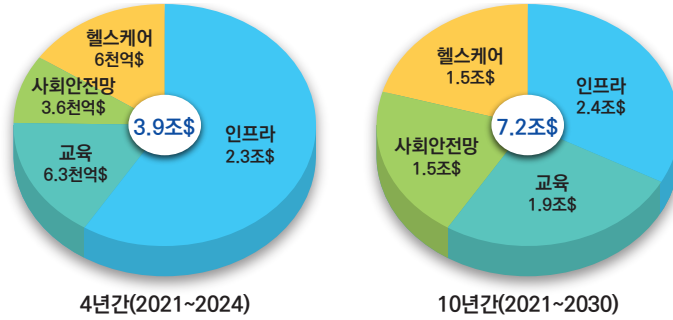
〈표 1〉 미국의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비교

구분	CARES Act	Heroes Act
전체규모	2조 2,000억 달러	2조 2,000억 달러
현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득 75,000달러 이하 개인에게 연간 1,200달러 현금 지급 • 연소득 기준 100달러 초과 시마다 지급액 5달러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ES Act와 동일
부양가족 현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세 미만 부양가족에 대해 인당 500달러 지급(24세 미만 대학생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 제한 없이 모든 부양가족에 대해 인당 500달러 지급
연방실업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 제공 실업급여에 더해 주당 600달러 추가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ES Act와 동일
연방실업급여 지급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7월 31일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월 31일까지 연장 • 주정부 프로세스 지원을 위해 9억 2,500만 달러 할당
중소기업급여 무상지원 프로그램(P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650억 달러 예산을 중소기업 무상대출 형태로 지급(급여에 75% 이상 사용 조건), 1,3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남았으나 8월 8일 신청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로 300억 달러 예산 할당, 분기별 수익이 25% 이상 감소한 200명 미만 고용 중소기업에 2차 대출 허용(상장기업은 2차 대출 자격 제외)
고용유지 세금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지출 최대 1만 달러까지 50% 세금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ES Act와 동일
학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12(12학년 이하) 학교에 1,820억 달러, 고등 교육에 390억 달러, 돌봄시설에 570억 달러 예산 편성
코로나19 검사 치료비용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0억 달러 규모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슬로건은 「보다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

-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중심의 대규모 인프라 산업에 지출을 통해 경기부양 기초 속에 중산층 복원 및 공공경제 구축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기업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할 전망
 - 바이든 정부는 고소득자 대기업 세금감면 및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중시했던 트럼프와는 달리 부자와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조세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며 특히 최고세율, 급여세율 및 자본소득세율을 인상하고 기업의 법인세 인상, 해외수익에 대한 과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 확보 및 조세 재분배 기능을 강화시킬 전망
 -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21→28%로 인상될 예정

- 바이든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책대에 적극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인프라 투자의 경우 친환경 에너지 및 미국 내 공급망 확충 등이 중점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측
 -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4년간 총 3.9조달러(10년간 7.2조달러)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계획
 - 또한 클린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그린 인프라 투자, 미국 내 제조업 부흥 및 공급사슬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의 사회안전망, 헬스케어, 교육 혜택을 강화할 예정



〈그림 1〉 바이든 정부의 주요 분야 재정지출 계획(4년, 10년)

- 미국산 제품 구매와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미국 내 공급망을 확충할 전망
 -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투자시 미국산 제품과 기술공급망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Buy American, Make it in America 정책 등을 적극 활용할 전망
 - 또한 자국내 5G, AI, 바이오기술 등의 개발을 위한 R&D에 3천억달러를 투자해 신산업 성장을 가속화하고 안보·보건상 중요한 제품의 공급망 본국 회귀도 장려할 계획

〈표 2〉 바이든 정부의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정책

정책	내용
Buy American	• 4천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재료 및 서비스 구매를 통해 클린에너지 및 인프라 건설에 활용
Make it in America	• 중소 제조업체 미국 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금융지원 등 제공
Innovate in America	• 3천억달러 규모의 R&D 예산을 전기차, 5G, AI 등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
Supply America	• 국가 안보 및 보건상 중요한 제품으로 공급망을 미국으로 복귀

○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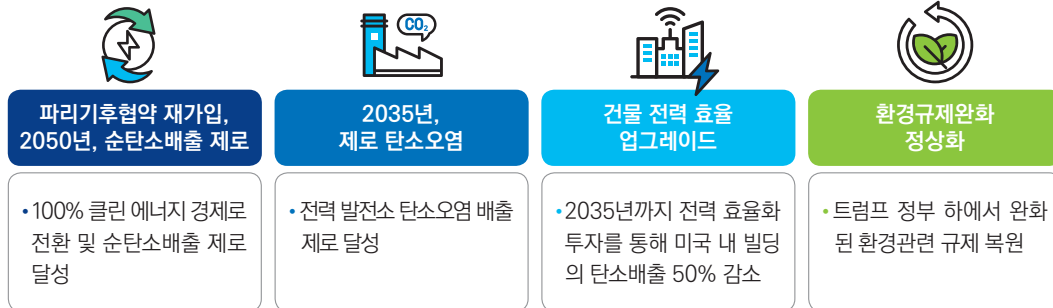
친환경 전기발전산업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예정

- 전기자동차(EV)를 지원하는 연비 관련 환경규정을 복원하고 「Clean Energy Revolution」 정책을 통해 2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한 그린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 2050년까지 완전친환경경제 및 탄소배출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메탄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 기술 및 운송수단의 우대, 정부시설 친환경 전환, 교통온실 가스배출 감축, 바이오연료분야에 투자를 통해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
 - 10년간 총 4,000억불의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분야와 기후변화 R&D분야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바이든 정부는 대규모 친환경 관련 투자로 성장회복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인프라,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
 - 바이든은 기업 감세 축소 및 조세피난처로부터의 자금 회수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환경 및 기후 관련 분야에 2조 달러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
 - **(전기차)** 2030년 말까지 50만개 이상의 신규 공공 충전소를 배치하고, 전기차 세액공제 부활, 미국 자동차 생산 및 자동차 인프라 분야에서 1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발표
 - **(인프라)** 4년간 400만 채의 건물 및 200만 채의 주택을 에너지 고효율로 개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무탄소 대중 교통시설 건설,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 관련 분야 사업에 따른 고용창출 최소 100만개 이상 예상
 - **(재생에너지)** 탄소 무공해 전력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열 지붕 및 공동체 태양열 시스템 800만개를 포함해 5억개의 태양열 패널 및 6만개 풍력 터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과제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발표

- 바이든 대통령은 10년에 걸쳐 5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2035년까지 미국 내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양의 50%를 감소시키며, 2050년까지 탄소가스 배출 제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거공약을 발표

- 위와 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1)전기자동차 충전소 50만개 보급 2)새로운 기후 연구기관 창설 3)건물 400만 채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2035년까지 건물 탄소발자국 50% 감축 4)친환경 버스 국내 생산 보급으로 2030년까지 대중교통 부문에서 무배출 실현 5)도전적인 연비기준 도입 등을 제안
- 미국은 주마다 상이한 친환경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8년에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미시간주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 그 외 뉴욕, 하와이 등도 탄소 중립을 선언, 향후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러한 친환경 전환 움직임 가속화 기대
- 현재까지 7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으며 한국에서도 2020년 10월,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바 있음



〈그림 2〉 바이든 정부의 클린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

○ 지방정부의 함의

미국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정책, 기후변화정책 그리고 신산업 정책에 반영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일자리창출과 경제회복 대안으로 활용해 경제 위기의 돌파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정책적 방향성은 유사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공약은 지역 주도형 그린뉴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

- 미국 바이든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기후변화정책 그리고 신산업 정책은 연방 자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정지출에 대한 자율권 및 재량권을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게 확대 위임하는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음에 주목 필요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 주도의 그린 뉴딜정책, 기후변화정책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예산과 제도장벽이 존재하는 만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공약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
-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한국의 지자체 단위에서도 1)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설정하고 탄소예산제도 도입을 운영 2)기후위기와 재난에 회복력을 갖출 수 있는 인프라 구축 3)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에서 탈산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4)차차분권과 연계한 지역 에너지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시책 강구 필요
-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세부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통계와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의 구축 필요

▶ **참고자료** : 「THE HEROES ACT」 Retrieved from <https://appropriations.house.gov/sites/democrats.appropriations.house.gov/files/Updated%20Heroes%20Act%20Summary.pdf>

▶ **내용문의** : 임태경(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 부연구위원, tklim@krila.re.kr, 033-769-9897)

▶ **지난호**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방안(김도형 연구원)

[원문보기](#)

✉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kril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